

【 해외금융뉴스: 북미 】

미국 건강보험업계, 정부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반박

□ 미국 건강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이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고용자 중심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 건강보험업계의 양대 그룹인 아메리카 헬스 인슈어런스 플랜(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과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Blue Cross Blue Shield)는 상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민간부문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적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따라서 초기 설계가 어떻게 되었든 공적제도는 내제된 장점을 이용해서 건강보험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의 고용자 중심 건강보험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대해 공적제도 지지자들은 공적제도 도입이 경쟁을 촉진하여 민영의료보험 공급자들의 비용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번 성명은 건강보험제도 관련 이슈에 대해 타협점을 찾고 있는 민주당, 공화 양당 의원을 겨냥해 작성된 것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는 의료비용 상승 억제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제공 등의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안은 경기침체, 재정적자 확대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빈곤자, 노인, 퇴역군인 등에 대해서만 정부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인들은 직장을 통한 민영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음.
- 의회는 아직 건강보험제도 도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당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Associated Press, 6/23)